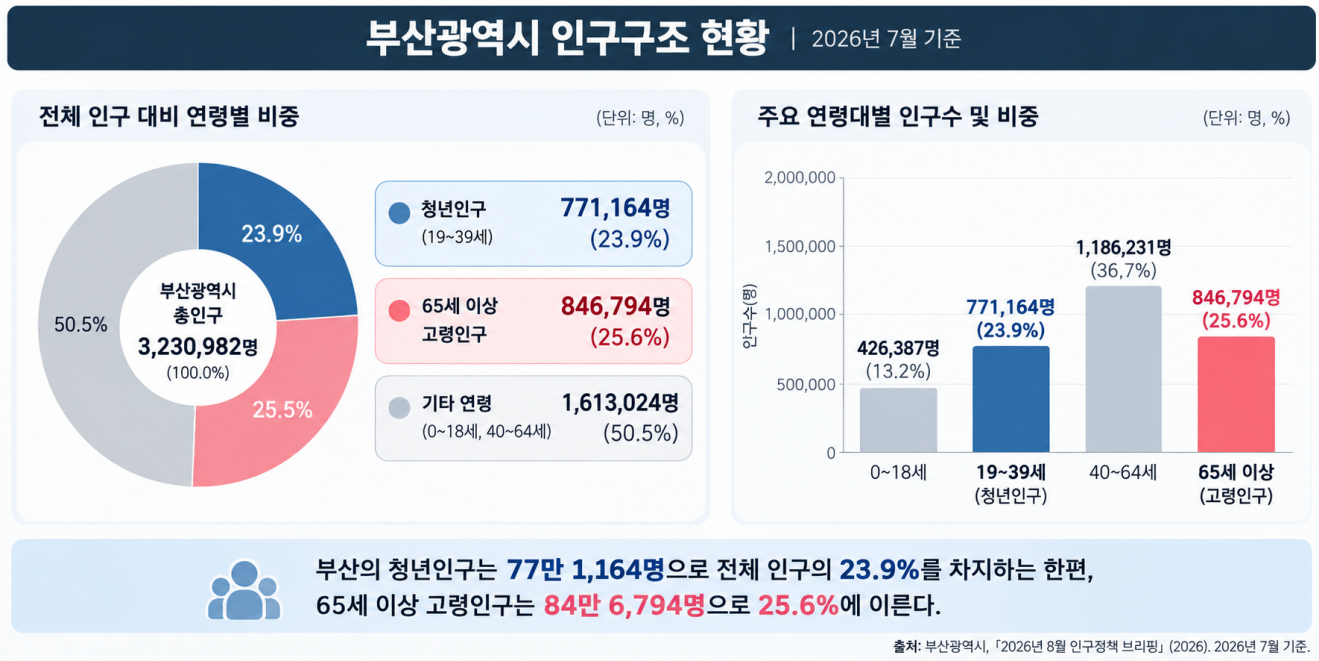
정책 제안서

동네에서 시작하는 자치, 부산 청년참여 사다리

부산형 청년 참여 사다리 시범사업 정책 제안서

Ⅰ. 정책 제안 배경 및 문제 정의

인구구조 변화와 생활권 주민자치의 지속가능성



부산은 청년인구 감소와 역외 유출, 고령화 등 복합적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2026년 8월 인구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7월 기준 청년인구는 77만 1,164명으로 23.9%를 차지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84만 6,794명으로 25.6%에 이른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력과 소비 기반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 세대 구성과 주민자치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산광역시, 「2026년 8월 인구정책 브리핑」(2026). 2026년 7월 기준 부산광역시 청년인구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 통계.

최근 부산시는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고, 정주 인구뿐 아니라 생활 인구까지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제안은 이러한 방향성을 생활권 주민자치 관점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청년이 지역에 거주·활동하는 것을 넘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생활권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주·정주에는 일자리·주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기에 지역사회 참여가 곧 인구 유출 감소나 정주율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청년 정주를 직접적 성과 목표로 설정하기보다 지역사회 관계 형성과 주민자치 참여 기반 확대를 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다.

부산광역시, 「제2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6~2030)」(2026).

국회미래연구원, 「청년의 연결은 평등하지 않다: 한국 청년들의 사회관계와 참여 지형」,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32호(2026). 본 연구는 청년의 사회적 연결과 참여 양상을 분석하여 청년 내부에서도 관계망과 참여 기회가 균등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제안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여정보·시간·비용·관계망 등 참여 접근장벽을 검토해야 할 근거로 활용한다.

2. 청년의 참여 부족인가, 참여기회의 불평등인가?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는 개별 관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참여 정보에 대한 접근, 시간·비용 제약, 주민과 관계망, 의견 반영률 등이 참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6년 국회미래연구원은 청년의 사회적 연결·참여가 학력·출신·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이는 사회참여 격차를 단순 무관심의 결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연구는 전국 청년의 사회적 연결을 분석한 것이므로 부산 주민자치에서 청년이 실제로 배제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부산 청년의 주민자치 경험과 정보·시간·절차상 접근 장벽을 확인하고,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에 적합한 개선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기존 청년정책과 주민자치제도 사이의 연결 문제

부산은 이미 다양한 청년 활동 및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2026년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은 60개 팀을 모집하여 공동체·사회문제해결·재능기부·자율 활동을 지원하며,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정책 발굴과 시정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일반 주민도 사업을 제안하고 소관부서의 검토 및 예산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자치 영역에서도 2026년 1월 기준 206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 4,478명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1,909개가 집계되어 있다. 특히 주민자치회 마을 의제 공모사업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체로 하여 마을 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경제진흥원, 「2026년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2026).

부산광역시, 「2026년 부산 청년G대 추진계획」(2026).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운영현황」(2026).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마을의제 공모사업 추진계획」(2026).

이처럼 청년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활동과 주민자치 관련 제도는 각기 존재한다. 그러나 청년이 발굴한 생활권 의제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공식적 검토 및 행정 처리로 연결되는 경로가 개방·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는 별개 문제이다. 가령 청년 커뮤니티가 지역문제를 발견하더라도 해당 의제를 주민자치위원회 검토에 연결하는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주민자치 위원이 아닌 청년이 의제 검토에 참여하는 절차가 불명확하다면 활동 성과가 일회성 프로젝트에 머무를 수 있다. 반대로 기존 제도가 연결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면 별도 조직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본 제안은 기존 제도 간 연결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청년의 ① 참여 진입 ② 생활권 의제 형성 ③ 공식 검토 연계 ④ 처리 결과 환류의 각 단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연결 공백에 한해 기존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4. 참여기회의 형평성과 지역 균형발전

부산 16개 구·군은 인구구조와 주거환경, 산업·생활 여건 및 지역사회 자원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신규 주거지역, 인구 감소 지역, 청년 지원 기반 발달 지역은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수요와 장애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생활권에 동일한 참여시설이나 청년활동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부산의 16개 구·군은 인구구조와 주거환경, 산업·생활 여건 및 지역사회 자원의 구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청년의 주민자치 참여기회와 접근 장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역별 기초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시설·프로그램의 일률적 공급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마다 여건에 적합한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해 생활권별 참여 경로·접근 장벽을 비교하고, 참여가 취약한 지역에 개선을 모색한다. 궁극적으로 청년이 어느 생활권에서 활동하더라도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주민자치·행정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 경로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양적 지역 균형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생활권의 사회적·제도적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발전을 뒷받침하려는 보완적 접근이다.

Ⅱ. 정책 목적 및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1. 정책 목적

부산 읍·면·동 생활권에서 청년 주민자치 참여 경로와 접근 장벽을 진단하고, 필요한 지역에 청년동네장과 개방형 로컬 청년 크루 활용 참여 촉진 모델을 적용하여 청년의 자발적 지역사회 활동이 기존 주민자치제도의 공식 의제 검토와 행정 환류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참여 경험이 적은 청년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참여제도의 개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생활권 주민자치 참여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기존 정책과 차별성

구분	기존 제도 기능	본 사업 보완 기능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청년 공동체 활동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	청년 활동의 주민자치 공식 검토 연계 및 참여 과정 단절 여부 진단
구·군 청년 프로그램 지원	청년단체와 행정의 협력사업 및 사회참여 지원	기존 주민자치 비참여 청년의 생활권 참여 진입 지원
주민자치회 마을 의제 사업	주민자치조직 중심의 마을 의제 선정·사업 신청	비위원 청년의 의제 제안·검토 접근경로 개선
주민참여예산	주민 사업제안·소관부서 검토·예산 심의	청년의 의제 구체화 및 적합한 행정절차 이용·결과 확인 지원

기존 사업이 청년 활동·주민자치조직 사업을 지원한다면, 본 사업은 청년의 생활권 참여가 기존 주민자치체계의 검토와 환류로 연결되는 과정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제도 밖 청년 발굴, 생활권 의제 검토요청서 작성, 주민자치·행정 연계, 처리현황 확인 등 기능을 실증한다. 청년동네장은 새로운 주민대표·행정조직이 아니라, 절차상 연결 공백을 보완하는 한시적 참여촉진자로 활동한다.

특히 단순히 청년동네장과 로컬 청년 크루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 주민자치 의제 연결 표준절차(안)」를 마련한다. 이때 의제 검토요청서, 소관 기관 연계 및 처리 현황 관리 서식, 참여장벽 유형별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여 기존 제도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는 지역에는 별도 인력을 중복으로 배치하지 않고 기존 절차의 안내·운영 개선을 우선한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참여촉진 인력의 필요성과 비용 대비 성과를 검증하고, 실효성이 확인된 개선 수단만 선별하여 확대·제도화를 검토한다.

3. 기본 추진 원칙

① 문제 진단 우선: 청년의 참여 경험과 제도적 접근 장벽을 조사하고 적합한 개입 수단을 적용

② 기존 제도 활용: 새로운 상설조직과 플랫폼의 신설을 지양, 기존 기관의 기능 및 권한 존중

③ 참여 형평성과 실효성: 기존 비위원 청년 진입 기회 확대하나, 양보다 검토와 결과 환류 중시

④ 실증 기반의 재정 책임성: 실행 지역과 비교 지역의 운영성과·비용을 검토, 후속 추진 여부 결정

Ⅲ. 사업 추진체계 및 세부 내용

사업 개요

구분	사업 세부 내용
사업명	부산형 청년 참여 사다리 시범 사업
사업기간	예산 확보 후 12개월
추진일정	2027년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편성 검토, 2028년 시범운영(안)
사업지역	부산광역시 3개 구·군, 6개 읍·면·동
실증구조	기초 진단 후 참여촉진 모델 실행 3개 동, 비교 3개 동 선정
참여대상	부산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세~39세 청년 및 시범 지역 주민
참여규모	실행 동별 청년 약 10명, 총 30명 내외 및 일반 주민 개방형 참여
현장인력	실행 동별 청년동네장 1명, 총 3명 이내
총사업비	약 7,800만 원(계략 추계)
추진체계	부산광역시-구·군-읍·면·동 행정-주민자치위원회-기존 청년지원기관 협력

※ 사업은 관계기관 참여 동의와 예산 확보를 전제로 추진하며, 실제 참여장벽 진단 결과에 따라 실행 지역·인력 및 예산 규모를 조정한다.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식 제도 참여 자격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2. 시범 지역 선정 및 비교설계

본 사업은 참여 촉진 모델을 일률적으로 도입하기보다, 생활권 특성이 다른 지역을 선정하여 참여장벽과 정책 수단 적용 가능성을 비교한다. 이를 위해 신규 생활권 형성, 인구구조 변화, 기존 청년 활동 기반 세 유형을 설정하고, 강서구·영도구·부산진구를 우선 검토 지역으로 제시한다.

시범 지역은 지역별 참여 여건을 비교하기 위한 후보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강서구·영도구·부산진구의 최종 선정 여부는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시군·읍면동별 성별·연령별 인구자료와 각 구·군의 청년정책 및 주민자치 운영자료를 검토하고, 참여기관 협의와 기초조사를 거쳐 확정한다. 지역별 인구구조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주민자치 참여장벽의 차이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참여 현황은 별도로 조사한다.

후보 지역	지역 유형	주요 검증 과제
강서구	신규 생활권 형성	신규 전입·활동 청년의 주민자치 참여 정보 접근성과 지역사회 연결
영도구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 감소·고령화 환경에서의 청년 참여 경로와 세대 간 참여 연속성
부산진구	기존 청년 활동 기반 연계	청년지원시설 및 커뮤니티 활동과 주민자치의 공식 의제 검토 간 연결

강서구는 명지국제신도시 등 신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지역사회 진입 과정을, 영도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민자치 세대 간 참여 연속성을, 부산진구는 기존 청년 활동 기반이 주민자치 참여로 연결되는 과정을 검토하는 유형이다. 다만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주민자치 참여격차 존재를 직접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선정 전 행정동별 인구구조와 기존 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다. 각 구·군에서는 청년인구 비중, 전입 특성, 주민자치 운영 방식, 기존 청년 활동 기반 및 행정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개 동을 우선 조사한다. 이후 참여장벽이 확인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지역 중 비교 여건이 유사한 동을 짝지어 실행 동과 비교 동을 선정한다.

실행 동에는 청년동네장을 통한 참여 촉진 모델을 적용하고, 비교 동에서는 기존 주민자치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 동일 기준으로 참여 현황과 의제 처리성과를 조사한다. 비교 동 기존 주민 참여기회나 공공서비스 이용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총 3쌍의 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비무작위 비교이므로 사업 인과 효과나 통계적 대표성을 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운영 가능성, 참여 경로의 변화 및 추가 비용을 탐색적으로 비교하는 데 평가 목적을 둔다. 아울러 기초 진단 결과 적절한 비교 지역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참여 촉진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때는 후보 지역 또는 실행 규모를 조정하며,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지역에 별도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다.

시범지역 후보의 공간적 구성



구 단위 후보지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구체적인 시범 읍·면·동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이미지는 구 단위 후보 지역을 표시한 지도이다.

3. 참여 경로 진단 및 개입 필요성 판단

사업 초기 6개 동 주민자치 참여환경을 공통 기준에 따라 조사한다. 조사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연령별 구성과 위촉 방식, 비위원 주민의 의제 제안경로, 청년 참여 경험과 접근 장벽, 기존 청년 커뮤니티와 주민자치조직의 협력 사례, 의제 접수·검토 및 처리 결과 안내 방식 등이다. 방식은 행정자료·운영 규정 분석, 주민자치 및 청년 지원 담당자 면담, 청년 대상 설문과 반구조화 인터뷰를 병행한다. 특히 기존 주민자치 참여 경험이 없는 청년을 포함하여 단순한 인지도 부족과 실제 제도적 제약을 구분한다. 진단 결과에 따른 우선 개입 방식은 다음과 같다.

참여장벽 유형	우선 개선 수단
정보 접근 장벽	주민자치 참여 정보 및 이용 절차 안내 개선
시간·이동 제약	회의 시간·의견제출 방식의 유연화
관계 형성 어려움	청년동네장을 통한 주민·지역단체 연결
공식 검토 절차 이해 부족	의제 구체화 및 소관 기관 연계 지원
처리 결과 확인 어려움	접수·검토·환류 관리 방식 개선

이후 지역별 「생활권 청년 참여 경로 진단서」를 작성하고, 확인된 장벽과 기존 기관 대응 가능성, 추가 인력 투입 필요성을 종합해 개입 수단을 결정한다. 참여 정보 안내나 회의 운영 방식 개선만으로 해결가능한 문제에는 청년동네장을 중복 배치하지 않는다. 기존 인력과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관계 형성 및 의제 연결의 공백이 확인된 경우에 한 해 참여 촉진 모델을 적용한다.

4. 청년동네장: 한시적 생활권 참여촉진자

청년동네장은 별도 주민대표나 행정 직위가 아니라, 청년의 생활 경험과 기존 주민자치제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보·관계·절차상 연결 공백을 보완하는 민간 참여촉진자이다. 실행 동별 최대 1명을 공개 모집하며, 지역 이해도와 주민 소통 역량, 활동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주요 기능은 다음 세 가지로 한정한다.

가. 기존 참여제도 밖의 청년 발굴 및 관계 형성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참여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청년센터·커뮤니티·지역 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과 접촉할 기회를 마련한다. 대학생뿐 아니라 재직·구직 청년, 대학 미진학 청년, 신규 전입 청년 등 다양한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참여 경로를 확보한다.

나. 생활권 의제의 공식 검토 연계

청년과 주민이 발굴한 의제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나 소관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문제 내용, 주민 수요, 소관 기관 및 검토 필요 사항을 정리하도록 돕는다.

다. 참여 과정의 이탈 방지 및 결과 확인

청년이 의제를 제출한 이후 검토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서 제공한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전달하며 후속 참여를 지원한다. 운영 방식은 월 1회 이상 관계기관 정례협의, 의제별 현장조사 및 주민숙의 지원, 필요시 개별 참여자 상담으로 구성한다.

5. 로컬 청년 크루: 의제별 개방형 참여집단

로컬 청년 크루는 특정 단체로 고정되는 상설조직이 아니라, 생활권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이 개별 의제에 따라 활동하는 네트워크이다. 기존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뮤니티 운영·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핵심 산출물은 활동 보고서가 아닌 「생활권 의제 검토요청서」로 설정한다. 서식에는 의제 발생 장소와 문제상황, 주민 수요·조사 근거, 개선 사항, 검토 요청 사항 등을 기재한다. 이를 통해 청년 지역사회 활동이 일회성으로 종료되지 않고, 기존 주민자치·행정 체계에서 검토가능한 구체적인 지역 의제로 연결되도록 한다.

6. 「청년 참여 사다리」 운영모델

본 사업은 청년 생활권 참여를 ① 발견·연결 ② 제안·숙의 ③ 공식 검토 연계 ④ 처리·환류 4단계로 운영한다. 청년동네장은 참여 희망자와 지역 주민을 연결하고, 로컬 청년 크루는 현장 조사와 공동 숙의를 통해 생활권 의제를 구체화한다. 이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기존 절차에 따라 검토를 요청하고, 실행 가능성과 후속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 제안자에게 결과를 공유한다. 특히 의제의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 과정과 처리 결과를 기록·환류하며, 단계별 참여 전환율과 이탈률을 측정하여 기존 참여제도의 연결 공백을 진단한다.



7. 생활권 의제 적용 사례

예컨대 청년이 야간 귀가 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주변의 안내시설과 보행환경에 불편을 느꼈다고 가정하자. 청년동네장은 관련 청년·주민을 연결하고, 로컬 크루는 현장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를 구체화한다. 이후 주민과 공동으로 개선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사안 성격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관할 교통·시설관리 부서로 연계한다. 주민 공동 활동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안내 정보 정비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시설 설치나 도로 구조 변경 등 행정권한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기관 검토에 따른다. 처리 결과는 수용·추가 검토·추진 곤란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자에게 안내한다. 사례의 핵심 성과는 시설 개선 자체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존 주민자치 참여 경험이 없는 청년이 지역문제를 구체화하고, 주민과 논의하며, 적합한 공적 절차를 통해 검토 결과를 확인하는 참여 경로가 실제로 작동했는가를 평가한다.

8. 행정기관별 역할 분담

의제 처리를 행정이 수용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며, 관계기관 권한과 법령·조례상 절차를 준수한다.

행정기관	역할
부산광역시	사업 총괄, 운영 기준 마련, 예산·성과 관리 및 확산 검토
참여 구·군	지역별 사업관리, 관련 규정 검토, 소관부서 협의·의제 처리 관리
읍·면·동 행정	주민자치 정보 제공, 참여 협의 지원, 적합한 소관부서 안내·연계
주민자치위원회	소관 의제 검토, 주민 공동 논의 협력 및 검토 결과 공유
청년지원기관·사업 수행기관	청년동네장 교육·활동 지원, 참여자 모집 및 성과자료 관리

IV. 사업 기간 및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 단계	기간	세부 내용
준비 및 기초 진단	1~2월	관계기관 협약, 3개 구·6개 동 선정, 기존 제도 및 참여 경로 조사
실행·비교 지역 확정	3월	진단 결과 분석, 실행·비교 동 선정, 청년동네장 모집·교육, 개입계획 수립
참여자 발굴·의제 조사	4~5월	기존 미참여 청년 발굴, 주민 연결, 생활권 의제 조사 및 공동논의
참여 촉진 모델 실증	6~9월	의제 구체화, 공동 숙의, 공식 검토 요청 및 후속 조치
처리 현황 점검	10~11월	의제별 진행 상황 점검, 참여자 경험 조사, 비교 지역 자료 수집
평가 및 개선모델 도출	12월	성과·비용 비교, 운영가이드 작성, 후속 추진 여부 결정

※ 청년동네장 및 현장 수행기관의 집중 운영 기간은 4~11월의 8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1~3월 준비·진단과 12월 최종 평가는 별도 편성된 조사·평가·운영예산을 활용한다.

Ⅴ. 소요 예산 및 재원 활용

1. 예산편성 원칙

신규 시설·상설기구·독립 플랫폼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행정시설과 청년지원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다. 청년 커뮤니티 지원 및 주민자치회 마을 의제 공모사업과 중복되는 별도 프로젝트 보조금은 최소화한다. 예산은 참여 경로 진단, 현장 연결 기능, 주민 공동 속의, 효과성 평가 등 실증에 필수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2. 예산안

총사업비: 78,000 천 원(약 7,800만 원)

세부 사업	산출 근거	예산
생활권 참여 경로 및 장벽 진단	6개 동 × 130만 원	780만 원
지역별 현장 수행·조정	3개 구 × 월 140만 원 × 8개월	3,360만 원
청년동네장 활동 지원	3명 × 월 45만 원 × 8개월	1,080만 원
주민 공동 숙의 운영	3개 실행 동 × 3회 × 50만 원	450만 원
참여 접근성 개선	3개 실행 동 × 150만 원	450만 원
참여 촉진 인력 교육	공통 교육 및 역량 강화	300만 원
성과·비용 비교평가	사전·사후 조사 및 자료 분석	800만 원
운영 지침 및 확산 매뉴얼	공동 서식·표준모델 제작	250만 원
홍보·보험·행정 운영 등	공통 운영 경비	330만 원
합계		7,800만 원

※ 위 예산은 정책제언 단계의 최대 소요액을 기준으로 한 추계이며, 실제 사업비는 인력 배치와 수행기관 협약, 견적 및 관련 집행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Ⅵ. 성과 관리 및 효과성 평가

1. 평가 기본 방향

양적 실적보다 주민자치 참여 경험이 적은 청년의 진입, 생활권 의제 공식 검토 연계, 처리 결과 환류·운영비용 중심으로 평가한다. 참여자·의제를 구분하여 단계별 진입·이탈 현황을 기록하고, 실행 동과 비교 동의 기존 주민자치 운영 성과를 가능한 범위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한다.

2. 핵심 성과지표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참여자 수 자체보다 참여 경로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신규 참여자 비율은 참여기회 개방성을, 공식 검토 전환율은 기존 제도와 연결성을, 결과 환류율은 처리 과정 투명성을 측정한다. 이는 자체 평가 기준이며, 시범 사업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목표를 확정한다.

지표	산출 기준	평가 목적
신규 참여자 비율	기존 주민자치 활동 경험이 없는 청년 수 ÷ 전체 청년 참여자 × 100	기존 참여제도 밖 청년 유입
공식 검토 전환율	공식 검토 접수된 의제 ÷ 사전 검토 요건 충족 의제 × 100	생활권 의제의 주민자치·행정 연계
결과 환류율	처리 결과·진행 상태 안내 의제 수 ÷ 결과 안내 기한 도래 접수 의제 × 100	검토 과정 책임성과 투명성

3. 보조 성과지표

자료는 청년동네장 활동일지, 의제 검토요청서, 처리 현황 관리대장, 주민자치·행정기관 운영자료와 설문·인터뷰를 통해 수집한다. 접근이 어려운 경우 확인 항목과 미확인 항목을 구분 명기한다. 지역 소속감·참여 효능감은 동일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조사하되, 응답자 이탈·표본 규모를 고려하여 해석한다. 변화가 확인되더라도 직접적 인과 효과로 단정하지 않는다.

사업 종료 후에는 지역별 진단 결과, 의제 처리 현황, 참여 경험 및 운영비용을 종합하여 「생활권 주민자치 의제 연결 표준절차(안)」를 확정한다. 이때 기존 제도로 수행가능한 기능과 추가적 참여 촉진이 필요한 기능을 구분하여 후속 정책 적용 범위와 재정 소요를 제시한다. 시범 사업 지속이나 확대 자체를 성과로 판단하지 않고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참여 접근성: 신규 참여자 유입 및 기존 참여 경험이 적은 청년의 참여 정도

② 제도 연결성: 공식 검토 전환율, 처리 결과 안내 및 단계별 이탈 정도

③ 운영 효율성: 참여 촉진 인력 투입에 따른 성과 차이 및 추가 비용

결정	결정 기준
확대 검토	기존 운영 실적보다 개선되고, 추가 운영비용과 행정부담이 수용가능한 경우
운영방식 조정	참여정보안내·회의방식 등 기존 협업개선만으로 유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우
축소·종료	참여 경로 개선이 되지 않거나 인력·운영비용이 과도하여 효율성이 낮은 경우

Ⅶ. 기대효과 및 정책적 의의

1. 청년 주민자치 참여 접근성과 형평성 강화

기존 청년 커뮤니티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청년도 생활권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주민과 논의할 수 있는 참여 경로를 제공한다. 특히 정보·시간·관계망 등 참여장벽을 진단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개선안을 적용함으로써 주민자치 참여기회의 개방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2. 기존 제도 간 연계 및 주민자치의 실효성 제고

청년 생활권 활동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소관 행정기관 검토 절차에 연결하고, 의제별 처리 결과를 확인·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참여사업의 신설보다 기존 청년정책과 주민자치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문제 해결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3. 지역사회 관계 형성 및 생활권 자치역량 확충

청년과 주민이 공동으로 지역문제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대 간 협력과 지역사회 관계 형성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별 참여 여건을 고려한 운영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사회적·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수 있다.

4. 비용효율적 제도개선 및 지역 확산 기반 마련

참여 촉진 인력의 추가 효과와 운영비용을 비교·평가하여 필요한 정책 수단을 선별하고, 생활권 의제 검토요청서·처리 현황 관리 서식·기관별 역할 분담 등을 포함한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별도 상설조직이나 플랫폼을 설치하지 않고도 다른 읍·면·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실효성과 수행 여건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는 일률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지역별 참여장벽과 행정 역량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Ⅷ. 결론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의 경제적·물리적 정주 여건과 함께, 주민으로서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새로운 조직·사업을 반복 신설하기보다, 운영 중인 청년 활동과 주민자치제도가 실제 생활권에서 얼마나 개방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산형 청년 참여 사다리」는 청년동네장과 로컬 청년 크루를 활용하여 청년 생활권 활동을 주민자치의 공식적인 의제 검토와 행정적 환류로 연결하는 참여모델을 실증한다. 아울러 지역별 참여장벽과 정책 수단의 성과·비용을 비교하여 기존 제도에 적용가능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분권의 실효성은 참여제도의 수가 아니라, 다양한 주민이 해당 제도에 실제로 진입하고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본 제안은 이러한 참여 경로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생활권 주민자치의 개방성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참여 기반의 형평성을 재고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